

7. 2024년 대선 주요 공약 비교 - (1) 통상/무역, 환중국, 세금

	2017~2020 년 트럼프 1.0	2021~2024 년 바이든 1.0	2025~2028 년	
	트럼프 1.0	바이든 1.0	바이든 & 해리스 2.0	트럼프 2.0
통상/ 무역	[미국우선주의, 보호무역주의] * 기업 리쇼어링 추진 *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탈퇴 *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 재협상 추진→USMCA 체결	[동맹국 간 우호적 통상 정책] * 미국-대만 무역 이니셔티브, 미국-일본 지속 가능한 광물 협정 등 양자 협정 체결 * 다자간 무역협정, 협력 강화: IPEF (인도-태평양) 출범, APEC (중남미-미주), APEC 협력 강화 * TPP 재가입 X * CHIPS, IRA 통한 공급망 회복	[동맹국 간 우호적 통상정책] * 해리스는 바이든의 동맹국 중시 기조 계승, 명백한 무역정책 발표는 X * 신뢰가능한 파트너로의 공급망 재편 (프렌드쇼어링, 니어쇼어링) * USMCA 등 기존 무역 협정 이행, 다자주의 복원 * WTO 무역 분쟁 시스템 개혁	[1.0 대비 강화된 보호무역주의] * 트럼프상호무역법 :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 수입품에 부과 * 보편적 기본 관세 :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%의 최저 관세 부과 * All-tariff Policy : 관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로 연방 소득세 대체 * NAFTA → USMCA로 대체
환중국	[미중 무역 분쟁 본격화] * 화웨이, ZTE의 통신장비 사용 금지하는 행정명령 시행 * 中 기업 수출 통제 리스트 등재 * 中 제품에 대한 25% 관세 부과	[대중국 견제 동일, 대중 고관세] * 중국 向 지적재산권 이전에 대한 조사, 수출 통제 대상 기업 추가 * 멕시코 우회 수입 모니터링 강화 * 생물 보안법 통과 추진 * 대중 관세 대폭 인상: 중국산 전기차(25%→100%), 태양광 셀(25%→50%), 철강/알루미늄(7.5%→25%) 등	[중국을 전략적 경쟁 관계로 상징] * 중국과의 갈등을 관리 *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견제, 대중 관세 인상 등 무역 견제 지속	[대중국 무역 강경책 고수] *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취소 * 모든 필수품에 대한 中 수입 단계적 중단하는 4개년 계획 도입: 전자제품, 철강, 의약품 등 * 대중 관세 단계적 인상, 최대 60% 부과 (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평균은 19.3%) * '20년 무역합의 이행 촉구
세금	[부유층, 대기업 감세 기조] * 세금 감면과 일자리법 (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) 재정: 법인세 인하 35% → 21% 영구화, 개인 소득세 인하 (39.6% → 37%) '25년까지 적용	[부유층, 대기업 증세] * IRA 시행을 통한 세수 확보 정책 제시 (10년 간 3,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소 효과) * 최저 법인세 및 자사주 매입세: IRA 법안을 통해 3년 평균 10억 달러 이상 수익 기업을 대상으로 '23년 과세연도부터 15% 최저세율 설정, 자사주 매입세 1% 부과	[FY2025년 예산안, 부자/대기업 증세] * 해리스, 세금 인상 포괄하는 바이든 정부 FY2025 세입 제안 지지 * 법인세율 인상 (현행 21 → 28%), 대기업 최저세율 15 → 21%로 상향 * 자사주 매입세 1% → 4%, 순투자소득세 3.8% → 5% 인상 * 고소득자 세율 인상: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독신,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부부 기준, 개인 소득세 최고 37% → 39.6% * 억만장자세: 순자산 1억 달러 이상 부유층 대상 최저세율 25% * 다국적 기업 해외 소득세율: 10.5% → 21% 인상 [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, 기회경제] * 유자녀 중산층 가정 위한 세액공제: 자녀 1인당 최대 3,600달러 * 자녀 세액공제 확대: 신생아 첫해에 중산층, 저소득층 가정 최대 6,000달러 세액 공제 * 일선 근로자를 위한 세금 감면: 무자녀 저소득층 직장인, 부부 최대 1,500달러 세금 감면 * 건강 보험료 절감: 건강보험개혁법 마켓 플레이스에서 건강보험 구매할 수 있도록 세금 인하 * 팁 소득에 대한 면세 * 중소기업 창업 세액공제 확대 (5,000달러 → 50,000달러)	[부유층, 대기업에 대한 '감세'] * 세금 감면과 일자리법 2.0 연장, 영구화 추진: 법인세율 21% 영구 유지 → 20% 인하, 개인 소득세 인하(최고세율 37%) [노동자/약자를 위한 세금 감면] * 자녀 세액공제 확대: 소득 제한 없이 자녀 한 명당 가정 최대 5,000달러 세액 공제 * 팁에 대한 세금 폐지 *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: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, 초과분에 대한 세금 부과를 폐지 * 노년층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연방 소득세 폐지 [제조업 재건을 위한 세금 감면] * 법인세율 인하: 미국에서 제품 생산하는 기업에 한해 현행 21% → 15% 인하 * 세제 혜택 확대: R&D 세액 공제 확대, 중장비 등 기업 설비 구매 시 첫째 100% 비과세 처리

자료: 외신 종합 보도, House.gov, The white house, Agenda 47 등 종합, 삼성증권 정리

(다음 페이지 계속)

7. 2024 년 대선 주요 공약 비교 -(2) 환경, 인프라, 반도체, 에너지

	2017~2020 년 트럼프 1.0	2021~2024 년 바이든 1.0	2025~2028 년	
	트럼프 1.0	바이든 1.0	바이든 & 해리스 2.0	트럼프 2.0
환경	<p>[화석연료 장려, 기후변화 규제 완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파리 기후협약 탈퇴 * 기후 규제 완화, 화석 에너지 생산 증대, 기후 관련 연구 기관들에 대한 예산 축소 * 청정전력 계획(Clean Power Plan)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 * 화력발전 장려하는 적정 친환경 에너지 규칙(Affordable Clean Energy Rule) 추진 	<p>[IRA 시행 등 청정 에너지 장려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성명 발표 * IRA 집행을 통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시행 * 2050년까지 100% 청정 에너지화 탄소배출량 0% 달성 목표 지지 * FY2025 예산안 - 석유/가스 기업 보조금 폐지 촉구 * '32년까지 신규 승용차의 67%, 대형트럭의 25%를 전기차로 전환 목표 * 국가 환경 정책 개정안에 서명: 연방 허가 프로젝트 승인 전 환경 영향평가, 공공의견 수렴 절차 거치도록 하는 법 	<p>[친환경 정책 기조 승계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해리스는 IRA를 비롯한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계승 (좌, 바이든 1.0 참고) * IRA 통한 세제 인센티브 등으로 전기차 전환 장려 지속 * 화석연료세 감면 폐지 * 단, 친환경 기조 일부 약화 : 프래킹(수압 파쇄법) 허용 : 전기차 의무화 비 지지 : 에너지원 다양화 추구 	<p>[美 최우선 에너지 정책 시행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에너지 자립: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 미국 내 원유, 천연가스 등 개발, 석탄, 수력 등 '현실적 발전소' 건립 * 그린뉴딜 정책 중단, 화석연료 기업 지원: IRA에 기반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 축소, 내연기관차 생산 증대,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* 고비용 친환경 대선 최자가 에너지 제공: 제조업 재건 * ESG 투자 폐기: 취임 즉시 행정명령으로 퇴직연금(401K)의 ESG 투자를 영구적 금지 * 재가입한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
인프라	<p>[인프라 투자 입법화 시도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교통, 수도, 광대역 통신 및 5G 등 인프라 투자 법안 시도 : 다만, 양당 간 합의 실패로 인프라 투자 입법화는 무산 	<p>[초당적 인프라법 (Bipartisan Infrastructure Act) 통과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0년간 1.2조 규모의 투자, 향후 5년간('22~'26년) 5,500억 달러* 	<p>[바이든 1.0 정책 기조 연장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초당적 인프라법에 근거해 할당된 예산 규모 집행 (좌, 바이든 1.0 참고) * 50억 달러 규모 37개 운송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투입 계획 	<p>[생활수준 혁신 위한 쿼텀 도약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도시 건설: 연방토지에 10개의 미래형 신도시 건설 * 항공 모빌리티 혁신: 州 사이 이동 수단, 농촌 경제 활력 증진 * 공공환경 개선: 50개 주 노후 건물 철거
반도체	<p>[미중분쟁, 반도체 공급망 재편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반도체 공급망 규제 강화 : 예) 화웨이 수출 통제 *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 설립 촉구 : TSMC 등 미국에 공장 설립 	<p>[반도체 과학법(CHIPS and Science Act) 서명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26년까지 527억 달러 규모 투자: 반도체 제조(390억), R&D지원(110억), 반도체 기술 전환, 제품 제작(20억), 반도체 부문 인력 투자(2억), 국제 정보, 기술 안전 등 반도체 공급망 확보(5억) * 반도체 연구 및 혁신에 5년간('23~'27년) 1,700억 달러 규모 예산 책정 	<p>[바이든 1.0 정책 기조 연장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인플레이션 감축법, 반도체 과학법 제정 이후 후속조치 진행 (좌, 바이든 1.0 참고) 	<p>[반도체 공급망 재편, 대중 견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반도체 시설, 조립 라인 공급망 재편 * 반도체 투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
에너지	<p>[화석에너지 인프라 투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청정 전력 계획(Clear power plan) 재검토 * 화력발전소 건립, 연안 석유 및 가스 탐사 가능 지역 검토 지시 	<p>[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통과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0년 간 4,370억 달러 규모 투자. (전기차 등 청정에너지: 3,690억 달러,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원 연장: 640억 달러, 서부지역 가뭄대응: 40억 달러) * 전기차 세액 공제: 특정주요 광물,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하는 경우 3,750달러, 최대 공제액 차량당 7,500달러 * FY2024 예산안에서 석유, 가스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언급 * 기업평균 연비 규제제도 강화 	<p>[IRA 후속 조치 진행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할당된 예산 집행 (좌, 바이든 1.0 참고) 	<p>[IRA 전면 폐지, 축소 공언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그린뉴딜 종식: 취임 첫날 전기차 전환의무 등 폐지 [화석/원자력 에너지 생산 장려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화석연료 생산기업에 세액 공제 * 연방 토지 내 석유 저장고 개방 * 석유, 천연가스 시추 허가 절차 간소화 * 전력비축유류의 재고 확대 * 원자력 에너지 생산 장려: 원자력 발전 허가 절차 간소화, 소형 모듈 원자로 투자 증액, 원자력 규제 위원회 개편

참고: * 도로, 교량 및 주요 프로젝트(1100억), 여객철도(660억달러), 안전 및 연구(110억), 대중교통(392억), 광대역 통신망(650억), 항만 및 해운(166억), 항공 (250억), 수도 인프라(550억), 전력과 그리드(650억), 인프라 복원(472억), 청정 스쿨버스 및 페리(75억), EV충전(75억), 사회연결망(10억), 환경오염 인프라(210억) 등
자료: 외신 종합 보도, House.gov, The white house, Agenda 47 등 종합, 삼성증권 정리 (다음 페이지 계속)

7. 2024년 대선 주요 공약 비교 - (3) 건강, 교육/복지

	2017~2020 년 트럼프 1.0	2021~2024 년 바이든 1.0	2025~2028 년	
	트럼프 1.0	바이든 1.0	바이든 & 해리스 2.0	트럼프 2.0
건강	<p>[의약품 접근성 확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네릭 의약품 승인 확대: FDA 역사상 트럼프 재임기간 중 가장 많은 제네릭 의약품 승인 	<p>[제약회사 폭리 규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오바마 케어(Afford Care Act)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(~2025) 고령자 의료비 지원: 인슐린 가격 35달러 제한, 성인 메디케어 가입자 대상 무료백신 제공, 메디케어 처방약 본인 부담금 2,000달러 제한 ('25년~) 약가 협상: '24년 9월, 10개 의약품 최종 가격 결정되며 '26년부터 시행 예정 ('29년까지 50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 협상 예정) 	<p>[처방약 비용 및 의료비 부채 경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약품 비용 절감 대상자 확대: 인슐린 가격 35달러 제한, 처방약 본인 부담금 2,000달러 제한을 고령자 → 전 인구 대상 확대 메디케어 협상 가속: 바이든 1.0 약가 협상 정책 승계하되, 더 많은 의약품 가격 인하, 적용 시점 가속 보건 의료 산업 투명성 요구: 의약품 중간상 불공정 행위 단속 (주정부와 협의) 의료 부채 탕감: 신용정보에서 의료 부채 삭제, 미국인 구조 계획 기금 확보 (최대 3백만명, 70억 달러 의료 부채 탕감) 정신 건강 관련 검진 1년에 3번 무료, 암 치료제 개발 지원 낙태권 보장: 취임 후 생식의 자유 보호하는 법에 서명 	<p>[오바마 케어 폐지, 국내 판가 인하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오바마 케어 폐지 필수 의약품 자체 생산: 중요 의약품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 해소, 중국 수입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순차적으로 모든 필수 의약품 미국 내 생산, 의약품 부족 문제를 종식 대형 제약사 횡포 종료: 취임 즉시 주요 약품에 대한 글로벌 무임승차를 중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대형 제약사들의 해외 판매가 인상, 국내 판매가는 인하 요구 생식권 보장: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치료 무상지원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금지 반대 (州 정부 결정 사항)
교육/복지	<p>[보수주의 교육 개혁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에 대한 연방 통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('17년 4월) 비시민자에 대한 복지 규제 강화 	<p>[학자금 탕감 등 대학교육 지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2년 학자금 탕감안 제시: 대법원 위헌 판결로 무산 '24년 SAVE 플랜(Saving on Valuable Education): 위헌 판결 이후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 	<p>[공교육 개선,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~4세 아동 유치원 등원 의무화, 교사 임금 인상, 장학금 증액 [주택 임대 및 구입 비용 경감] 주택정책 4개년 계획 - 300만 채 신규 주택 건설: 건설업체 생애 첫 주택사업 독려: 임대주택 건설업체 인센티브 확대: 혁신 주택건설 연방기금 신설 (400억 달러 규모), 건설 허가절차 간소화 주택 임대료 인하 위한 입법 (의회 동의 필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악랄적 투자 방지법 입법 추진 → 단독주택 대량 매입하는 월가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 제거 2) 임대주택 담합 방지법 입법 추진 최초 주택 소유자 위한 자금 지원: 2년간 임대료 적시 납부한 첫 주택 구입 가정에 최대 25,000달러 지원 [의료품 비용절감] (의회 동의 필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임 첫 100일간 의료품비 절감, 약덕 업체 규제로 인플레 해결 의료품 가격 폭리 금지 연방 법안 입법 추진 대기업 식품에서 과도한 이윤 추구 제한 → FTC와 州 법무장관 조사, 처벌 권한 확보 	<p>[보수주의 입각한 학교 교육 개혁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기독교적) 보수주의 교육 추구, 진보적 성향 사립대 견제: ①Agenda 47, 위대한 학교를 위한 10원칙: ②反 유대주의 사립대 기부금에 세금, 벌금 부과. 同 재원으로 American Academy 설립, 일반인에게 무료로 온라인 학사 취득 지원 홈 스쿨링 가정 지원: 홈 스쿨링 가정에 연간 1만 달러 세금 면제 교육 시스템 개혁: 인종 차별 연루 대학 조사, 마르쿠스 주의 다양성 추종하는 관료 해임으로 비용 절감 학부모 권리 옹호: 학부모와 지역 교육청이 교장, 교사 고용, 보상, 해임 등 결정, 학교 선택권, 프로젝트 기반 실습, 직업 및 진로 교육 등 확대 [주택 구입 비용 경감, 규제 완화] 공화당 정당정책: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신규 주택 건설 허용, 주택 건설 관련 규제 완화,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제 혜택 제공 [신용카드 금리 상한제]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금리 10% 상한제 도입

자료: 외신 종합 보도, House.gov, The white house, Agenda 47 등 종합, 삼성증권 정리

(다음 페이지 계속)

7. 2024년 대선 주요 공약 비교 - (4) 이민/사회, 고용/산업, 총기규제

	2017~2020 년 트럼프 1.0	2021~2024 년 바이든 1.0	2025~2028 년	
	트럼프 1.0	바이든 1.0	바이든 & 해리스 2.0	트럼프 2.0
이민/ 사회	<p>[불법 이민 억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, 구금경찰 및 추방군 활용 고숙련 외국인 이민 제한, 망명자 추방 비자 복권으로 알려진(Diversity Visa) 이민 비자 프로그램 폐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(DACA) 중단 난민 수용자 상한 추가 축소 : 연간 15,000명 	<p>[반 이민정책 철폐, 이민제도 개혁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민 제도 현대화: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 취득 기회를 확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일시 중단 : '23년 10월 건설 재개 이민, 여행 금지 중단: 이란, 북한 등 6개국에 해당 폐지됐던 DACA 제도 복원/개선 : DACA 대상자들에게 오바마 케어 개방 난민 수용 상한선 확대: 15,000명 (트럼프) → 62,500명(FY2021) → 125,000명(FY 2022) 	<p>[불법 이민 단속, 합법 이민 장려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경 보안인력 1500명 추가 배치 안전한 이민을 위한 보호소 추가 설치 드론을 활용한 범죄 방지 및 이민자 보호 이민 절차 간소화 : 6년 → 6개월로 단축 	<p>[국경통제, 反 이민 정책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불법 이민자 복지 박탈: 불법 체류자 노동 허가 중단, 취소, 불법 이민자 자녀의 자동 시민권 부여 불허, 공공주택 입주 금지 등 행정명령 시행 퇴역군인 노숙 문제 해결: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비용을 재향군인 지원으로 전환 <p>[사회치안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산관광 불법화 인신 매매 처벌: 국경 강화 마약 중독자, 노숙자 근절 : 단, 21세 이상 성인이 소량의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을 지지
고용/ 산업	<p>[이민 제한, 자국민 고용확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자리 창출 규모: 취임 후 첫 3년 간 660만 개 창출 비자 규정 개혁: 자국 노동자에 더 많은 일자리 기회 제공 목적. : '20년 6월, IT 전문 비자(H-1B), 비숙련 취업비자(H-2B), 주재원 비자(L-1) 발급 중단 행정명령 	<p>[성장산업 통한 일자리 창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자리 창출 규모: 반도체법, 인프라법 등 토대로 취임 후 3년 간 1,500만개 일자리 창출 (제조업 부문 80만 개) 최저임금 인상: 연방정부 고용 계약 근로자 대상. 시간당 10.95 → 15달러) 비자 발급 프로그램 중단 행정명령(트럼프 정부) 폐지 	<p>[청정에너지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등록 견습직 등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 의료, 운송 부문 노동 공급 지원 복지, 안전, 안정성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선 중소기업 창업 지원: 첫 임기 중 중소기업 2,500만개 창업 목표, 근로/사업체 직면허제도 완화 	<p>[자국 공급망 재편, 규제 완화 를 통한 일자리 창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개 Freedom City 건설 추진 → 일자리 창출 효과 필수 의약품 자체 생산 → 대중 의존도 경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<p>[국부펀드 조성을 통한 산업 재건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계 수입 통해 확보한 세수 → 제조업, 국방, 의료 산업 등 지원하는 국부펀드 조성 <p>[新 미국 산업주의 구성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렴한 에너지 제공: 알래스카 야생보호구역 내 석유, 가스 탐사 재허용 → 취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 절반으로 경감 특별 구역 설정: 연방정부 토지 활용, 저, 세금, 저 규제 적용되는 특별 구역 설립 제조업 대사 임명: 제조업체의 대규모 미국 귀환을 추진 → 중국, 한국, 독일이 타겟
총기 규제	<p>[총기 소유의 자유를 지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헌법 2차 개정안의 보장 지지: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 보장 	<p>[총기 제한 옹호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기 폭력예방국 설립: 백악관 산하기관. 법무부에 총기밀매법 기소 권한 부여 Safer America plan 발표: 10만명의 경찰관 추가 고용 	<p>[총기 제한 옹호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기 판매 시 신원 조회 실시 공격용 무기, 대용량 탄창 금지, 안전한 총기 보관 요구 등 촉구 총기 제조업자 책임 면제 폐지, 일련번호 없는 총 소지 금지 촉구 	<p>[총기 규제 철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든 주에서 총기소지 허가 목표 학교와 군사기지에서의 총기 금지구역 완화 공립학교가 무장 경비원 고용 하도록 자금 지원

자료: 외신 종합 보도, House.gov, The white house, Agenda 47 등 종합, 삼성증권 정리

(다음 페이지 계속)

7. 2024년 대선 주요 공약 비교 - (5) 국방/안보, 정치, 금융

	2017~2020 년 트럼프 1.0	2021~2024 년 바이든 1.0	2025~2028 년	
	트럼프 1.0	바이든 1.0	바이든 & 해리스 2.0	트럼프 2.0
국방/안보	<p>[고립주의, 자국 우선주의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북 정책: 북한 비핵화 위한 압박 정책, 북미정상회담 3차례 개최 등 고위급회담 중시, 대북 추가 제재 부과 중동 정책: 이란과의 협합의 (JCPOA) 파기, 이란 경제 제재 아프간 전쟁: 탈레반과 평화협정 체결(20년 2월)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 	<p>[동맹 중시 외교 복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북 정책: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 시도 라우 전쟁: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(무기지원법 통과) 중동 정책:親 이스라엘 기조 하에, 가자지구 전쟁 지원.親 팔레스타인 시위 억압 아프간 전쟁 종결: 아프간 철수 완료, 탈레반, 카불 함락 	<p>[전통적 동맹 중시 기조 승계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리스는 바이든 1.0(민주당)의 전반적 외교 기조를 승계 대북정책: 명확성에 기반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전통적 동맹 외교 기조 NATO 동맹 강화 중동 정책: 두 국가 해법을 통한 중동 안정 추구. 해리스, 바이든과 함께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구출 노력 지속. 하마스 규탄. 이스라엘 자기 방어권 지지 	<p>[美 최우선 외교, 대외 관여 중단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악화된 군사력 재건: 미국판 아이언돌 구성, 우주군 창설 NATO 의미 재평가: NATO 회원국 방위비 지출 GDP 대비 2% → 3%로 인상할 필요성. 라우 전쟁 지원으로 美 국방능력 고갈 라우 전쟁, 유럽 관여 중단: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 중단 중동정책:親 이스라엘, 집권 시 反 이스라엘 시위 통제할 계획
정치	<p>[反 관료주의, 기업가 대응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내각: 3G 내각 (Gazillionaire, General, Goldman: 억만장자 기업가, 군 장성 출신, 골드만삭스 투자은행 출신) 대표성 제한: 백인, 남성 중심 대응 	<p>[다양성 포용한 정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내각: 오바마 정부 인사 비중 높은 구성(앤서니 블링컨, 엘런 저무장관 등) 소수자 적극 대응: 초대 내각부터 여성, 유색 인종, 성소수자 포함 	<p>[통합정부 구성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참모진: 바이든 정부 인사 비중 높은 구성 당선 시, 공화당 인사 기용 계획 	<p>[대대적 권력 재편]*(Agenda 47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참모진: 레이건, 트럼프 정부 인사 비중 높은 구성 Deep State 혁명: 관료 견제, 불량 관료 퇴출하는 대통령 권한 회복 예산제한통제법, 독립규제기관 (FTC, FCC 등) 대통령 직속 개편 [정부 효율성 위원회 설립] 위원장: 일론 머스크 신설 규제 1개 당 10개 규제 폐지
금융	<p>[금융 산업 성장 중시, 규제 완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제 성장, 규제 완화, 소비자보호법 (§2155) 서명: '08년 금융위기 재발 방지 위해 입안된 도드-프랭크법 규제 완화: ① SIF 기준 충족 요건 상향: 중소지방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적용 기준 완화 (기준: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은행 → 2,500억 달러) ② 볼커룰 규제 완화 →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통한 고위험 상품 투자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③ 소비자보호, 퇴역군인의 의료 부채 정보를 신용보고서 상 제외 ④ 소규모 벤처캐피탈 펀드 투자회사법 적용 면제 (투자자 250인 이하, 투자자산 1,000만 달러) 	<p>[금융 시스템 안정 중시, 규제 강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은행 규제 재강화: SVB 사태 재발 방지 목적. 트럼프 때 완화된 자산규모 1,000억~2,500억 달러 은행에 대한 규제 재강화 촉구 바젤 III 최종안: 자산 규모 1천억 달러 이상 대형은행, 은행 지주 대상 자기자본 비율 요건 강화 → 시행 유보, 완화 논의 진행 중 [反 가상자산, 규제 강조] 디지털 자산 채굴 에너지(DAME) 소비세 도입 추진: 가상자산 채굴 전력 비용에 약 30% 과세. FY2024년 예산안에 포함했으나, 업계 반발로 무산. FY2025 예산안에 재포함 SAB 121 회계 지침 도입: 은행이 수탁받은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대차대조표 상 부채로 기록 → 추가 준비금 축적 의무가 발생 	<p>[가상자산 산업, 성장과 안전성 동시 고려할 필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리스는 바이든 대비 스타트업, 가상자산 업계에 우호적일 가능성 시사 다만, FTX 파산 등 문제 방지 위해 가상자산으로 인한 금융 규제의 필요성도 존재한다는 관점 	<p>[親 가상자산 산업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: 신시아 루미스 비트코인 비축법 발의, 재무부 기금 통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5%(100만개) 보유 목표 → 정부 부채 문제 해결 정부조직 개편: 임기 첫날 캔슬러 SEC 위원장 교체, 가상자산에 관한 대통령 자문 위원회 설립 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BDO) 발행 금지 에너지 비용 절감 통한 가상화폐 채굴 장려 [금융규제 완화] 바젤 III 최종안 시행 유보: 자산 규모 1천억 달러 이상 대형은행, 은행 지주 대상 규제 축소: 비은행 금융기관 (자산운용사, 헤지펀드, 가상화폐 기업) 규제 재검토 소비자 금융회사(핀테크, 신용카드) 수수료에 대한 조사 축소

자료: 외신 종합 보도, House.gov, The white house, Agenda 47 등 종합, 삼성증권 정리